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21면	도의회 사무식	1
강원도민일보		강원도의회 2024년도 사무식[1/2]	2
江原日報	01면	'강남까지 40분대' 여주~원주 복선전철 11일 착공	4
江原日報		[포토뉴스] 횡성 2024년 새해 충혼탑 참배	5
강원도민일보	14면	[신년 충혼탑 참배] 정선군	6
강원도민일보	14면	[신년 충혼탑 참배] 평창군	6
인제인터넷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로 업무 시작[1/3]	7
강원도민일보	01면	오가는 생활인구, 정주인구 5배…지역소멸 극복 열쇠	10
강원도민일보	22면	11년만에 명칭 변경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새출발	11
江原日報	02면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	11
MBC 강원영동	온라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 개최	12
강원도민일보	26면	[화요시선] "2024 강원동계청소녀올림픽, 세계 축제의 장 ...	13
강원도민일보	13면	[동정] 최상기(위 왼쪽) 인제군수·이춘만(위 오른쪽) 군의...	14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14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박대현(화천) 도의원	14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김홍규 시장·김기영 시의장·박호균 도의원·김형익 ...	14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15
江原日報	02면	"道 5대 미래산업 육성·4대 혁신 지속"	16
강원도민일보	02면	국제학교·상속세 등 쟁점 특례 수두룩…부처 설득 관건	17
江原日報	04면	강원 청년 절반 "졸업 후 수도권 가겠다"	17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시 인구정책에도 1년새 고작 26명 증가	18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고령층 10년새 40% 늘어…청소년은 '뚝'	18
강원도민일보	11면	동해안 지진·해일 대피장소 홍보부족 지적	19
강원도민일보	13면	인제군 동서고속철 연계 역세권 개발 박차	19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지역대학 강원 학생 외면해서야	20
강원도민일보	17면	[사설] 군사보호 해제지, 기회의 땅으로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총선 승부처 된 강원, 지역 현안 해결 기회 돼야	22

江原日報

2024 01 03 ()

21



도의회 시무식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일 도의회에서 시무식 및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강원도의회 2024년도 시무식

이설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도의회 시무식 및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박형재 경제산업전문위원이 대통령 표창, 유영곤 의정팀장·임창민 의장비서관, 김범주·장지혜·이연순·한미경 주무관이 의장 표창을 받았다. [강원도의회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도의회 시무식 및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날 박형재 경제산업전문위원이 대통령 표창, 유영곤 의정팀장·임창민 의장비서관, 김범주·장지혜·이연순·한미경 주무관이 의장 표창을 받았다. [강원도의회 제공]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관계자들이 2일 춘천 우두동 충열탑을 찾아 참배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관계자들이 2일 춘천 우두동 충열탑을 찾아 참배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lofi@kado.net

江原日報

2024 01 03 ()

01

‘강남까지 40분대’ 여주~원주 복선전철 11일 착공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성사업 착공식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원주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한문희 코레일 사장, 권혁열 강원자치도의회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동·서축철도 네트워크의 단절구간인 여주시

교동~원주시 지정면 구간 22.17km를 연결,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 간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총 사업비 9,309억원이 투입된다. 동서축철도인 강릉선은 인천 월곶~판교~여주~원주~강릉 구간 중 판교~여주 57km와 원주~강릉(강릉선) 120.7km는 복선화가 완료됐다. 월곶~판교 34.2km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권인 수서까지 40분대로 단축된다.

허남윤기자

2024 01 02 ()

江原日報

[포토뉴스] 횡성 2024년 새해 충혼탑 참배



횡성2024년 새해 충혼탑 참배 행사가 2일 횡성보훈공원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경녀 횡성교육장, 박순걸 횡성소방서장, 최종웅 농협은행횡성군지부장, 전성택 횡성군노인회장, 박덕식 횡성군재향군인회장, 보훈단체장, 군청 실.과.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14



정선군 최승준 정선군수는 2일 전영기군의장, 김기철 도의원, 강선구 부군수 등과 함께 신월리 충훈탑을 참배하고 새해를 시작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14



평창군 평창군의 새해 현충탑 참배행사가 2일 평창읍 노산 현충탑에서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 지광천·최종수 도의원, 정장호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 01 02 ()

갑진년 새해 “충혼탑 참배”로 업무 시작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한 이준만 군의장, 엄윤순 도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 충혼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최상기 군수, 엄윤순 도의원



▲ 충혼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박현봉 부군수



▲ 충혼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 충혼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먼저 오전 9시에는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엄윤순 도의원,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박현봉 부군수 등 주요 간부급 공무원들의 충혼탑 참배가 진행됐다.



▲ 충혼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이준만 군의장



▲ 충혼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조준식 부의장



▲ 충혼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 충혼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이어 10시에는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을 비롯하여 조춘식 부의장과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배를 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인제인터넷신문]이강희 기자

심광섭(greeninje@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01

오가는 생활인구, 정주민구 5배...지역소멸 극복 열쇠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한 경 고음이 커지면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류인구까지 지역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인구를 도입,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공백과 지역쇠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강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인구를 잡아야 강원도가 산다'를 연재한다.

① 리퀴드 폴리탄(Liquid politan)으로

강원 16개 시군 등록인구 감소

액체처럼 유연도시 도입 집계시

생활·체류인구 4~5배 늘어나

각종 인프라 확충 근거로 충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152만 7807명으로 1년 전(153만 6498명)보다 869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시·군 중 지난 1년간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원주시 696명, 고성군 31명 등 2곳이 유일했다. 반면, 나머지 16개 시·군은 인구가 모두 감소했으며, 1년 새 가장 많은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강릉시(1942명)였다. 이어 △철원군 808명 △삼척시 804명 △동해시 801명 △속초시 752명 등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비교해볼 경우에는 이 같은 격차는 더욱 커진다.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1만 4265명으로 전체 인구(5132만 5329명)의 50.68%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수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12월 말 기준

단위/명	2022년	2023년	증 감
강원도	1,536,498	1,527,807	-8691
춘천시	286,664	286,426	-238
원주시	360,807	361,503	+696
강릉시	211,381	209,439	-1942
동해시	89,426	88,625	-801
태백시	39,428	38,702	-726
속초시	82,806	82,054	-752
삼척시	63,455	62,651	-804
홍천군	67,977	67,309	-668
횡성군	46,532	46,359	-173
영월군	37,728	37,332	-396
평창군	40,990	40,659	-331
정선군	34,931	34,202	-729
철원군	42,256	41,448	-808
화천군	23,388	23,007	-381
양구군	21,383	21,056	-327
인제군	32,206	32,020	-186
고성군	27,274	27,305	+31
양양군	27,866	27,710	-156

이후 수도권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구소멸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도내에선 철원군과 양양군이 생활인구 확대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올해 처음 집계한 철원군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4만 3000명·2023년 6월 기준)의 약 5배인 22만명 규모이고, 체류인구(17만 7000명)만 봐도 등록인구의 4.1배다. '서평성지' 양양군은 지난해 스마트관광빅데이터 분석 결과, 생활인구가 7만 53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2만 7700여명)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김정수(철원) 도의원은 "철원 인구의 4배가 넘는 인구가 철원을 오간다는 것은, 인프라 확충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정주 인구보다 관계 인구에 방점을 찍는 리퀴드 폴리탄(액체처럼 유연한 도시)의 개념이 필요하다"며 "생활인구를 잡아야 강원도가 산다"고 강조했다. 박지은·이철화

江原日報

2024 01 03 ()

02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 출발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2일 심영섭 강원경자청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이동호 동해시의장, 김기하·최재석·박호균·유순옥 도의원, 김규태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김형익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전역찬(사)강원경제인연합회장, 우용철 동해시번영회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심영섭 청장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여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7월 개청,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 산업지구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동해=전명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22

11년만에 명칭 변경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새출발

2013년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지 11년 만에 '동해안' 권을 떼어내고 '강원' 권으로 명칭을 변경한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현판식을 갖고 새출발에 나섰다. 지난 1일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름을 바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심영섭)은 2일 청사현

관앞에서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 정일섭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장,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등 기관·단체장 등 지역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MBC 강원영동

2024 01 02 ()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 개최

배연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으로 명칭을 바꿔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원경제자유구역청 현판식에는
심영섭 청장을 비롯해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김기철 도의회 경산위원장 등이 참석해
입법 예고와 조례 개정 등의
명칭 변경 관련 경과 보고와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망상 1지구 신규 사업자 공모를 비롯해
2, 3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북평지구 입주 기업 추가 유치와
옥계지구 산업시설 용지 분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2 ()

26



화요시선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장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세계 축제의 장 되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0월 3일 그리스에서 채화한 성화불꽃이 11일 서울광장에서 힘찬 국내 여정을 시작해 부산·세종·제주·광주에서 불을 밝히고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을 모두 순회한 이후 마지막 도시인 강릉에 지난달 28일 도착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매주 대회 준비 점검회의를 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고, 티켓예매율은 64%에 달하며 대회의 성공을 예감하고 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개최 이래 최대 규모로, 선수 1900여 명과 전 세계 80여개국 관계자 1만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총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의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전 세계 청소년대표 선수들이 81개의 메달을 놓고 2주간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그동안 공들여 준비한 강원2024대회의 성공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는 모든 사항을 다시 점검하고 세계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한다.

첫째, 안전한 개최를 위한 점

13개 의무실 250여명 인력 배치
안전·위생·방한 대책 수립 만전
교육·문화행사 동시 진행 주목
청소년들 함께 즐기는 축제

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경험은 이번 대회 준비의 결정적 자산이다. 경험을 토대로 잘 추진된 점은 자산으로, 부족했던 점은 타산지석삼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선수단을 위한 보안 인력, 다중인파 관리를 비롯해 선수와 관람객을 위한 방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현장에서 문제 없도록 운영돼야 한다. 경기장 위생과 긴급의료 준비도 철저를 다 해야겠다. 대회 기간 개·폐회식장 등 13개 의무실에 의료인력 250여명을 배치하고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병원, 정선군립병원 등 3곳을 지정 병원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현장

에서도 이러한 역량이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하고 지속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대회 점검에서 평창과 강릉을 찾아 “평창동계올림픽의 비법을 활용해 각국 선수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말처럼 이번 대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전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민간 스키장 대여 이외에 대부분 기존 올림픽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번 대회에서 평창올림픽 당시 시설과 경험을 유산삼아 적극 이용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실상부한 올림픽 개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주인공인 만큼 스포츠를 넘어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대회조직위는 ‘K-컬처와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강릉아트센

터에서는 대회기간 발레, 오케스트라, 합창, 무용 등 국립예술 단체의 공연뿐 아니라 평창동계에서 국내 유명 K팝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국 전통놀이, 한복체험 등을 비롯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경험할 프로그램들을 마련 중이며,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동계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등도 준비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되어 단순한 스포츠대회를 넘어 세계가 즐길 수 있는 열린 대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모두 협력하고, 응원하고, 화합할 시간이 다가왔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러낸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황리에 치러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치와 매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릴 시간이다.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관심과 함께 즐거운 축제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13

최상기(위
왼쪽)인제
군수·이춘
만(위오른
쪽) 군의

장·염윤순(인제) 도
의회 농림수산위 부위
원장은 3일 오전 11시
군체육관에서 열리는
군청년회의소 주관 신
년교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09

박기영 도
의회 안전
건설위원
장은 3일
오전 11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
서 열리는 2024년 춘
천상공회의소 신년인
사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11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은 3일 오전 11시 라카
이샌드파인에서 열리
는 강릉상공회의소 신
년인사회에 참석한다.



김홍규(위 왼쪽)시장·
김기영(위 오른쪽) 시
의장·박호균(아래 왼
쪽) 도의원·김형익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15

박대현(화
천) 도의
원은 3일
오전 11시
춘천 스카

이컨벤션에서 열리는
춘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 01 02 ()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이무철(춘천).양숙희 (춘천).박찬홍(춘천).박대현(화천) 도의원은 3일 오전 11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춘천상공회의소 2024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강정호(속초).진종호(양양).이지영(비례) 도의원은 3일 오전 11시 속초 마레몬스 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속초상공회의소 2024년 설악권 신년인사회에 참석.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은 3일 오전 11시 인제실내체육관 식당에서 열리는 2024 인제군 신년교례회에 참석.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3일 오전 11시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강릉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4 01 03 ()

02

“道 5대 미래산업 육성·4대 혁신 지속”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반도체, 바이오를 비롯한 5대 미래산업은 키우고 인사·재정·규제·소통 4대 혁신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일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마부정제(馬不停蹄·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자세로 나아가겠다”며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씨를 뿌렸다면 올해는 수확을 얻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이모빌리티, K-연어 5대 미래산업을 역점적으로 키워 나가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새해 첫 간담회에서 밝혀...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역점 GTX-B 춘천 연장 이달 발표 용문~홍천 철도 예타 1분기 결정

지난해 말 국내 첫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의 여세를 몰아 올해도 각종 현안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 지사는 “우리가 규제자유특구 시즌 1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시즌 2인 글로벌 혁신특구를 가져올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다. (전국적 경쟁이 치열해) 막판까지 아슬아슬했다”며 “의료데이터를 인공지능(AI) 화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택해 향후 6년간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춘천에 기업도시를 조성하는)기업혁신파크의 경우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빨리 법 통과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은 1월 중 발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문~홍천 철도 예타 대상 선정 여부도 지난해 말로 예정됐다가 연기됐다. 예측이 어렵지

만 1분기 내에는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취임 일성이었던 4대 혁신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재정 혁신을 이어가야 한다.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데 서로 간의 양보가 다소 아쉬운 그런 상황도 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보다 안정적인 인사 혁신을 이어가고 도청 2청사, 산림엑스포 파견 등 희생 정신을 발휘했던 직원들을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기자간담회를 새해에도 계속하는 등 소통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국제학교·상속세 등 쟁점 특례 수두룩...부처 설득 관건

2024 01 03 ()
02

강특별 3차 개정안 정부 협의 본격화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목표

지역형평성 문제 등 난관 예상

강원랜드 규제완화도 입법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은 올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정부 부처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차 개정

당시, 정부 부처 반대로 무산됐던 특례들과 신규 특례들이 3차 개정안 입법과제 등이 각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도는 22대 총선 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 이후 도내 시·군과 도의회, 강원연구원 등과 함께 발굴한 70개 입법과제가 핵심이다.

관건은 각 정부 부처 설득이다. 70개 입법과제에는 국제학교 설립과 내국인 면세점 설치, 강원랜드 규제완화 등 강원특별법 2차 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쟁점 특례들이 대

거 담겼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에만 허용·운영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소멸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귀족학교 논란 등 교육 평등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는 제도를 제외하고 국제학교 설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도 해당 특례를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강원랜드 규제완화도 주요 쟁점이다.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로 정부 부처·관리감독 기관

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매출 총량제 한부터 최소 영업시간, 게임기·테이블 수 등 제한이 따른다.

강원도는 강원랜드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카지노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매출액이 늘면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폐광기금이 증가해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복합리조트화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강원랜드가 복합리조트 계획을 제시할 경우 매출 총량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감면 특례의 3차 개정안 반영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재정 특례다. 도내 단지·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속세 등 국세를 감면해 기업 대규모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로 추진되는 상속세 감면 특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정부 부처와의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내국인 면세점 설치 특례 역시 지역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각 쟁점 특례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발전 위한 아주 핵심적인 특례이지만, 중앙부처는 형평성 잣대를 내세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 지역 소멸 위기-어떻게 극복하나 /

2024 01 03 ()
04

강원 청년 절반 “졸업 후 수도권 가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년 가운데 ‘졸업 후 강원도에 남겠다’는 인원은 4명 중 1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자치도가 도내 1만5,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강원자치도 사회조사’에서 10~30대를 대상으로 졸업 후 정착 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 26.4%만 강원도를 꼽았다. 서울이 42.8%, 경기·인천이 10.8%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를 희망했다.

졸업식을 앞둔 대학가에는 이미 ‘탈(脫) 강원’ 현상이 뚜렷하다.

(하)경제·문화 격차 해소 시급
‘강원 남겠다’ 4명 중 1명 불과
20대 일자리·임금 불만족 높아
문화 여가시설 ‘만족’ 14%뿐

강원 영동권 대학의 영상 분야학과 졸업 예정자인 김모(29·춘천시 교동)씨는 동기 20명 중 유일하게 도내 기업에 취업했다. 동기들은 모두 수도권에서 근무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다. 김씨는 “동기 중 80%가 수도권에서 유학 왔는데

강원도의 정주 여건(문화·소비·교통시설)에 만족하지 못했다”며 “전공 분야를 살려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수도권에 많다고 보고 강원도를 떠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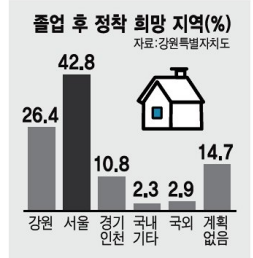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인가’를 조사한 결과 20대 응답자의 58%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임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20대는 28.5%가 ‘불만족’이라고 답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강원지역의 문화 인프라도 MZ 세대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

다. 문화 여가시설 만족도(접근성·충분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대 응답자의 14.8%만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 연령대 중 만족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30대 이상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 ‘초·중고 공교육 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응답률이 23.6%로 2년 전 대비 4.5%포인트 낮아졌다.

인구 유입 정책의 1위는 ‘일자리 지원(49%)’이었고, 저출산 지원정책 1위는 ‘양육비 지원(37.6%)’이



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역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지역별 장점을 따질 겨를도 없이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쏠리고 있다”며 “지방대 일자리 할당제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09

춘천시 인구정책에도 1년새 고작 26명 증가

작년 12월 기준 29만753명
전입 지원금·주소 이전 무색
전입보다 전출 많아 골머리

춘천시가 2024년까지 인구 30만명 돌파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춘천시 인구가 26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유입한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본지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춘천시 인구는 29

만753명이다. 지난해 1월 춘천시 인구가 29만727명인 점을 감안하면 1년새 26명 증가한 셈이다. 시가 집계하는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내국인과 외국인, 춘천에 주소를 둔 해외 동포를 모두 합친 규모다.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 집계와는 차이가 있다. 춘천시 인구는 2022년 7월 29만명을 돌파한 이후 1년6개월째 29만1000여 명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들어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29만 1311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지난해 9월 29만1285명으로 내

려앉은 춘천시 인구는 지난해 10월 29만1028명, 지난해 11월 29만929명, 지난해 12월 29만753명 등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세다.

춘천시는 지난해 2024년 인구 30만명 돌파를 목표로 대학생 전입 지원금 확대, 주소이전 독려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무위에 그치게 됐다. 지난해 춘천시가 전입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쓴 예산은 모두 18억599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학생 신규전입자는 1933명, 직장인 집단 전입장려금 수혜자 중 전입신고가 완료된 사람은 386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마저

도 대학생 전입 지원금 예산은 지난해 춘천시의회 당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6억원 중 5억원이 삭감, 11억원만 책정된 상태다.

춘천시는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1.5배~2배 더 많고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점이 전체적인 인구 증가를 막는 요소로 보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입할 때는 사유를 적지만 전출 인구는 따로 사유를 적지 않아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대학생 주소이전을 더욱 독려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10

원주 고령층 10년새 40% 늘어...청소년은 '뚝'

65세 이상 전체 17.7% 차지
중고교생 2만911명 25% 급감
10가구 중 4가구 '나 혼자 산다'

최근 10년간 원주지역 고령층(65세 이상)은 두배에 가까운 약 40% 증가한 반면 아동(0~12세)은 약 14%(5800여명) 줄었다. 또 현재 10가구 중 4가구는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말 기준 원주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6만4170명으로 전체 인구(36만1469명)의 17.7%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3년 11월말 3만8737명과 비교해 2만5433명 크게 늘었다. 비율로는 절반에 달하는 약 40% 증가한 규모다.

반면 아동(0~12세) 수는 2013년 11월 4만1942명에서 2023년 11월 3만6102명으로 5840명 약 14% 감소했다. 중·고교생(13~18세) 비율 역시 같은 기간 2만7833명에서 2만

911명으로 6922명(약 25%) 크게 줄었다.

원주지역 가구 수는 17만1190가구로 이중 1인 가구는 전체의 41.8%인 7만1654가구다. 7년전인 2016년 같은 기간(5만1260가구) 보다 2만394가구 늘은 것으로 비율로도 36%에서 6.8%p 증가했다.

읍면동 중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중앙동으로 67.5%에 달했다. 여기에 흥업면(58.4%), 일산동(53.8%), 부론면(53.6%), 판부면

(53.3%), 원인동(52.8%), 귀래면(50.8%) 등까지 포함하면, 25곳 읍면동의 약 30%인 7개 지역이 절반 이상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인가구 비율 30%미만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정면(27.7%), 행구동(29.8%) 단 두 곳에 그쳤다.

시는 이 같은 현황을 토대로 최근 인구 규모 및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 중이다.

정태욱 tae92@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11

동해안 지진·해일 대피장소 홍보부족 지적

강릉 해안가 대피장소 28곳 등
지진 시 초교운동장 등 21곳 지정
위치 사전숙지 주기적 홍보 당부

지난 1일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동해안에도 지진해일(쓰나미)이 관측돼 안전주의가 요구된 가운데 강릉 지역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지진·해일 대피시설 관련 정보를 모르고 있어 유사시에 대비해 홍보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지진해일 대피장소는 28곳(13개 지구), 지진 옥외 대피장소는 21곳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지진해일의 경우 해안가 일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지진의 경우 각 읍면동 내 초교 운동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정됐다.

이처럼 지역 내 대피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대피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민 정모(49)씨는 “재해 첫날부터 지진해일 관련 재난 안전 문자가 여러차례 오니 겁이 났고, 집 주변 대피장소도 잘 모르겠더라”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젊은 세대는 인터넷을 검색해 찾아간다지만 어르신들은 사전 숙지를 하지 않는 이상 우왕좌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주기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평소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매년 4월부터 10월 까지 지진안전주간을 운영해 홍보를 강화하고, 각 읍면동 전광판에도 지진해일 관련 안내문을 송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해 첫날 발생한 지진해일처럼 갑작스레 일이 터질 때면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된다”며 “매년 예산을 들여 지진과 쓰나미 대피장소 위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도청과 행안부 차원의 관리 점검도 꾸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제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13

인제군 동서고속철 연계 역세권 개발 박차

국비 140억원 확보 경제활성화
귀농귀촌 거점주거단지 조성 등
2028년까지 230억원 규모 투입

인제군은 오는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대비해 23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인제지역 역세권 개발에 나선다.

군은 오는 2027년에 개통될 예정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역

사 주변 활성화 사업을 위해 양구군·화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에 도전, 국비 총 28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별로 배분되는 이번 사업비는 인제군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구군 70억, 화천군 7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24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해당 사업비를 들여 △북합환승센터 △호수권시티투어 △귀농귀촌 거점주거단지 등 목적형 관광지 육성을 위한 역세권 개

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제지역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될 경우 인제역(원통리)과 백담역(웅대리) 2개역사가 들어선다.

군은 현재 추진중인 ‘인제군 역세권 종합개발구상 용역’을 오는 2월까지 마무리하고, 중소도시형 역세권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지방

소멸기금 30억원과 함께 이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사업으로 확보한 140억원을 포함해 모두 23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역사 주변 활성화 사업에 투입한다.

최상기 군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은 지역에 다시 한번 찾아오는 좋은 기회”라며 “철도역 중심으로 주거·관광·문화·상업 등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창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 17

지역대학 강원 학생 외면해서야

-의약학대 지역인재 부산 82%강원 21%격차 충격적

강원 출신 학생의 지역대학 의약학대 선발 비율은 부산에 비해 4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동기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연말 추천을 찾아 지역인재 전형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강원과 부산의 실태가 극명하게 비교 설명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등을 통해 부산은 82%를 그 지역 출신 학생으로 뽑는데 강원은 21%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원도내 대학은 물론 강원지역사회에서 향토인재 육성에 대해 등한시해 온 실태를 꼬집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산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제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제도 적용을 통해 선망 직종인 의약학대에 있어서 지역 학생 입학률이 80%를 넘는 사이에 강원은 고작 21%입니다. 부산은 '교육특구'와 같은 별다른 제도 없이도 지역인재 선발이 80%를 넘겼습니다. 지역의료 구조가 탄탄한 전남지역의 경우도 전남대의대 입학생 10명 중 8명 꼴로 그 지역 출신입니다. 비수도권의 대·치대·한의대·약대 모집인원 중 그 지역 학생이 차지하는 전국 평균 비율이 53%입니다.

이에 비해 강원은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도내에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 가톨릭관동대에 의과대학이 있긴 하나 일부 대학은 제도적으

로 명시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조차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강원지역 학생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서울에 부속병원을 둔 한림대와 연세대가 강원대에 비해 더 낮았습니다. 대학 측에서 지역 소멸 현안 및 도민 생명과 보건 문제에 대해 둔감한 것은 아닌지의 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강원대의대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앓은 채로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십여년 전부터 의료 전문인력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 의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의약학대의 낙후된 지역인재 선발이 초래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국 국립대의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정원을 배정한 중앙정부, 강원인재전형 비율조차 채우지 못하는 지역대학, 지역의대가 이런 실정인데도 방치해 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의약학분야에서 강원인재가 육성되지 않는 낙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단지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길만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능사일 수 없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며 지역의대에 도전하는 강원 학생의 앞길을 더 열고 지역에 남도록 어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03 ()

/ 17

군사보호 해제지, 기회의 땅으로

-강원 3618만여㎡ 전국 최대… 성장 발판 기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됐던 도내 군사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됐습니다. 접경지를 중심으로 폭넓게 지정됐던 보호구역은, 그동안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때문에 개발에서 뒤처지고 인구 유출이 가속해 소멸의 위기를 맞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들 지역은 군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군사보호구역 해제에 만족하지 말고, 제도의 변화를 정책에 접목해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접경지 공동화의 위기를, 산업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규모 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국방부는 최근 여의도 면적 18.8배에 해당하는 5471만 8424㎡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강원도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총 3618만 7384㎡로, 전체 해제 면적의 66.1%에 이릅니다. 2020년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해제지역으로 철원 문혜리, 청양리, 자등리, 잠곡리 일대와 화천 아리, 도송리, 서오지리, 원천리, 삼화리, 용암리 일대, 강릉 운산동, 덕현리, 상시동리 일대가 꼽힙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낙후 등 피해를 보았습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5개 군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해 지역 공동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군부대가 해체하면서 지역 상권은 급속히 침체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주민은 속속 타지로 이주해 접경지 상권은 존폐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지역에 활로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어, 지역 경기가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토지 거래와 개발에 따른 제약이 사라져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규제 해제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인구를 유입해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할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또한 개발에서 소외됐던 이들 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4 01 03 ()

/ 19

총선 승부처 된 강원, 지역 현안 해결 기회 돼야

을 4월10일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새해 벽두부터 총선 승리를 향한 여야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및 거대 야당에 대한 평가는 물론 차기 대권과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총선 때만 되면 표심을 얻기 위한 묘안이 쏟아져 나온다. 민심의 지지를 통해 정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단

이라는 점에서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자 정치 행위의 중대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은 빠르게

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는 8일 오후 2시 원주 인터볼고호텔에서 열리는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하는 등 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에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여는 등 실질적인 공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춘천과 원주 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위주로 각 정당의 공천 경쟁은 이미 막이 오른 상태다. 여당은 ‘여소야대’ 한계 속에서 패배하면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각오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도 총선 승리가 절실하긴 마찬가지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2022년 실시된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3연패의 수렁에 빠져든다.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처지다.

강원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화두다. 즉, 영호남과 달리 지역색이 뚜렷하지 않은 강원도는 ‘캐스팅보트’ 또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적어 표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할 때다. 이럴 때일수록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이 집중적으로 이슈화돼야 한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은 아직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으로 지

여야, 새해부터 승리 위한 발걸음 빨라져

“접경·폐광지역, 동해안권 지역경제 회생 등
현안 이슈화해 후보들의 경쟁 유도”

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안보 최일선에 위치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온갖 규제로 인한 경기침체는 인구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동해안권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 장기화로 파탄 지경에 이른 고성군 지역경제 회생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러한 지역 현안들이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제기돼야 한다. 그래서 여야 후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들이 해 나가야 한다.

江原日報

2024 01 03 ()

/ 19

새해 경기 전망 하락세, 이겨내야 지역경제도 산다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2024년 새해 경기 전망이 하락세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도내 소상공인 전망경기지수(BSI)는 전월 대비 2.2포인트 내린 80.9로 집계됐다. 도내 전통시장 전망BSI는 76.9로 지난달보다 3.1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10월부터 4개월째 이어진 내림세다. 도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전망BSI는 지난해 상반기 엔데믹 선언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해 9월 소상공인은 94.9, 전통시장은 103.1을 기록하며 상인들의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10월부터 상황이 반전돼 신년까지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강원권 48명 포함 전국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결과'도 비슷하다. 응답자의 92.5%는 2024년 경영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될 것으로 예측했다. 복합적 경제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대책이 필요하다.

바이러스 창궐과 힘을 앞세운 전쟁으로 지난 4년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고통과 질곡의 시간이었다. 고난의 칼바람은 파나는 노력으로 일궈놓은 생

업을 뿌리까지 뒤흔들며 위협했다. 하지만 나라 안을 보나 밖을 보나 경제 상황은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감염병과 전쟁의 검은 그림자는 걷히는 듯하다가도 더욱 짙게 드리운다.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히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줄과산 우려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그동안 숨겨진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올해 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 논리의 시장 개입 여지도 경계 대상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몰락을 불러온 각종 악재가 2024년에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이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새해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현안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단의 방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